

이덕일의 역사의 창



2020년에 해야 할 일

한 해를 보낼 때면 늘 다사다난(多事多難)했다고 말하는데, 2019년도 예외는 아니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검찰이 사건의 중심에 섰었다는 점이다. 검찰 자체가 사건의 중심이 되는 것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만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대부분의 나라 국민들은 검찰 수장의 이름을 모른다. 그것이 정상이다. 먹고살기 바쁜 일반 국민들이 검찰 수장의 이름을 알 이유가 무엇이 있겠으며, 심지어 부장검사나 차장검사의 이름을 왜 알아야 하는가? 이는 그 자체로 이 나라 검찰이 비정상적 조직이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

예전에는 국민들이 웬만한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알았다면 지금은 3선·4선이라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제도적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정치의 수요가 적어진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옛날에 비해서 국회의원들의 권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오직 검찰만 시대의 흐름과 거꾸로 여전히 상호견제 불패와 불법을 방지했다. 조선조 500여년 동안 권력형 부정부패를 찾기 힘든 것은 혼자

심에서 있는 것이다. 작년 말 공수처법이 통과되었으니 이제 곧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국가 체제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제도의 뿌리를 찾아보면 대부분 일제강점기 식민 통치에 가 닿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나 조선에서는 현재의 검찰 같은 권력기관은 상상도 못했다. 수사권은 당연히 여러 기관에 분산시켜 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권력기관의 상호 견제시켰다. 현재의 검찰과 비슷한 조직이 사헌부라면 의금부는 곧 출벌할 공수처와 비슷한 조직이었다. 만약 사헌부에서 조직 이기주의나 조직 구성원의 사익을 위해 수사를 방지하거나 자의적으로 수사할 경우 의금부에서 즉각 사헌부 관료를 구속했다. 의금부에서 같은 행위를 해도 마찬가지로였다.

지금의 법무부적인 형조와 경찰청격인 포도청에도 수사권이 있었다. 모든 권력기관은 철저한 상호견제 불패와 불법을 방지했다. 조선조 500여년 동안 권력형 부정부패를 찾기 힘든 것은 혼자

을 때도 삼간다는 신독(愼獨)을 좌우명으로 삼은 사대부들의 처신도 처신이지만, 상호 견제를 기본으로 권력기관을 설계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원칙을 무너뜨린 것은 조선총독부였다. 조선총독부는 1912년 조선형사령을 제정해서 검사에게 수사권·기소권을 독점시켰다. 이는 독립운동을 쉽게 때려잡기 위한 것이었다. 없는 죄도 만들어 내는 괴물 검찰의 탄생이었다. 필자는 공수처가 출범하기 전에 그간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받고 불법과 부정을 저지른 검사들의 자기 고백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다. 이 경우 정상을 참작하지는 국민 여론이 형성될 것이다.

되돌아보면 우리 사회 민주화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두 기관이 검찰과 법원이다. 그 전에는 법률적 근거는 없었지만 중앙정보부나 안기부에서 파견 나간 조판관이 검찰·법원의 상위에 있었다. 민주화 바람에 정보기관의 조정관들이 철수함으로써 비로소 검찰과 법원이 정상적인 국가기관이 될 수 있었다. 이때 검찰·법원이 정보기관 조정관들이 차지하

고 있던 권력을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었다면 지금 두 국가 기관이 OECD 국가를 중 최하위의 신뢰도를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2020년은 아직도 남아 있는 일제 식민 잔재를 청산하는 원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제는 대한제국강점 직후 조선총독부 중추원 산하에 '조선반도사 편찬위원회'를 만들어 '조선반도사'를 편찬했다. 아직도 남한 강간사학자들이 존경해 마지않는 이마니시 류(今西龍) 등이 편찬한 '조선반도사'는 우리 선조들의 역사 무대였던 대륙과 해양을 삭제하고 역사 강역을 반도로 축소시켰다. 박근혜 정권 때 만든 국정교과서는 물론 국정·검인정을 막론한 역대 국사 교과서는 이 '조선반도사'의 아류였다. 곧 공개될 검인정 교과서도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101주년을 맞는 2020년은 권력기관이 정상화되는 원년이자, 식민사학이 청산되고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가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 상식이 되는 원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신한대 대학원 교수)

社說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균형 발전 멀어지나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국내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수도권 일극 체제가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 이후 후속 대책이 실종되면서 수도권 집중이 오히려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통계포털의 주민 등록 인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한민국 전체 인구는 5184만 9861명이었다. 이 가운데 50.002%인 2592만 5799명이 서울, 경기, 인천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등 나머지 14개 광역 시도의 인구는 2592만 4062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 같은 수도권 쏠림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통계청이 최근 호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47년에는 수도권 인구 비중이 51.6%로, 비수도권 인구 비중보다 3.2%포인트(160만 명)까지 많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이유는 좋

은 일자리가 많고, 교육·문화 인프라가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집중은 노무현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과 세종시 건설 등 균형 발전 정책으로 일시적으로 둔화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로 다시 심화됐고, 노무현 정부의 계승을 자임한 현 정부에서도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토 전체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국민 두 명 중 한 명이 몰려 사는 나라는 분명 비정상적이다. 시민단체들이 이러한 현실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 분권 정책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수도권 신도시만 늘려갈 게 아니라 이미 약속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 이와 함께 일자리와 교육·복지·문화 분야를 포함한 특단의 균형 발전 정책으로 고사·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려내야 할 것이다.

휴일도 없는 이주 노동자 인권 침해 심각하다

이주 노동자들이 ‘힘들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한(Dangerous)’ 한국 사회 3D업종의 상당 부분을 메우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여러 분야에서 그러한 자리를 대신해 묵묵히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당초 ‘코리언 드림’을 꿈꾸며 고향을 떠났을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에 온 이들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인권을 전혀 존중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

실제로 어선을 타는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 장시간 노동과, 일상적인 폭언과 폭행, 고질적인 임금 착취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원 이주 노동자 인권네트워크’는 그제 서울 중로구 길스카우트 빌딩에서 열린 ‘이주 노동자 인권실례’를 주제로 한 집담회에서, 지난해 전반기의 한 섬에서 이주 노동자 등 선원 6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44명(70%)이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일한다’고 답했으며 대부분의 선원(92%)이 ‘휴일이 없다’고 답했다. 인도네시아 출신 어느 선원은 면담에서 “한 달 내내 새벽 1시30분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다”고 답했다. 또한 겨울 북극해에는 26시간 잠도 못자고 일한 적도 있다고 증언했다.

고용주들은 이들 선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속수를 여객선이 다니지 않는 섬에 마련해 ‘보이지 않는 구멍’ 상태로 만들거나,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납하며 신분증·통장을 압수하는 수법들을 쓴다고 한다.

이번 조사로 이주노동자 선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드러났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행정 당국과 관계 기관은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노동 실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의료칼럼

임플란트와 골다공증



유재식 조선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과 교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브론즈(BRONJ)는 골다공증의 치료제 중 하나인 비스포스포네이트 약물의 사용과 관련된 턱뼈의 골 괴사를 말한다. 2003년 처음으로 장기간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복용한 환자가 발치 후 발생한 턱뼈의 골 괴사 사례를 보고한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합병증이다.

비스포스포네이트는 과도한 골 흡수를 억제하는 약제로 미국 FDA 승인 후 골다공증 환자에게 좋은 치료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골다공증의 합병증을 줄여 주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그리고 골다공증 이외에도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의 전이를 막는 유용한 치료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장기간 투여받은 환자가 임플란트나 발치 등의 관혈적 치과 시술을 받은 후에 정상적인 치유가 되지 않고 턱뼈에 발생하는 골수염과 유사하게 턱뼈의 염증 및 골 괴사 등의 합병증이 종종 발생해 환자나 치과 의사에게 주의를 요하고 있다.

증상은 관혈적인 치과 치료 직후에 발생하기도 하나 현재 잘 사용하고 있는 임플란트 주위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환자

는 주로 해당 부위에 발치이나 부종, 고름이 나오거나 치아가 흔들리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게 된다. 브론즈는 주로 세가지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한다. 비스포스포네이트를 과거에 복용했거나 현재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없는 경우, 마지막으로 약물 부위에 뼈가 노출돼 있으면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않고 8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를 브론즈라고 진단한다.

일단 브론즈가 발생한다면, 치과 대학 병원 구강악안면 외과를 찾는 것이 좋다. 치료의 목적은 통증을 완화하고 연조직 및 턱뼈의 감염을 억제하며 골 괴사를 최소화하는데 있다. 우선 2주 이상의 항생제 복용을 하게 되며, 괴사된 뼈가 확인된다면 괴사된 부분의 골 제거를 시행하게 된다.

증상이 지속되는 데도 치과에 내원하지 않는 경우 광범위한 골 괴사나 병적 골절이 동반될 수 있으며, 심지어 부분적인 턱뼈의 절제를 해야 함으로 문제 발생시 빨리 병원으로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브론즈의 발병률은 골다공증

환자 중 0.01~0.5%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발병률은 낮은 편이기 때문에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복용한다고 해서 미리 걱정이 없어도 되지만 불량한 구강 위생 관리 시 브론즈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므로 환자 스스로의 관리, 정기적인 치과 진료가 중요하다. 그리고 비스포포네이트 치료제의 장기적인 투여 기간과 경우보다는 주사로 투약할수록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어 이런 환자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골다공증으로 인해 약을 복용하거나 주사제를 투여받고 있다면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물인지 알고 있는 것이 좋고, 치과 진료 시에 약물의 종류와 복용 기간 등을 치과 의사에게 알려주는 것이 브론즈 예방의 기초이다. 그리고 치과 의사는 장기간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복용한 환자에게 감염이 높은 관혈적 수술이 계획돼 있다면, 의과와의 협진을 통해 비스포스포네이트 치료제 중단 혹은 호르몬 제제 등으로 약물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구강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통증이나 부종, 고름이 나오면 즉시 치과를 찾아야 한다.

기고

산불은 사회 재난이다



윤병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전남지회장·임학박사

면적이 불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 비상 사태까지 선포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0년 동해안 대형 산불 이후 크고 작은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작년 4월에 발생한 강원도 강릉 삼척의 대형 산불은 세 명의 인명과 주택 55동 등 큰 피해를 안겼다. 국가에서는 이곳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지난 2014년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학연 산불방지 기관들과 함께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를 설립했다. 산불방지 인력 교육을 선도하는 허브 기관이다. 지금까지 분회 및 여덟 개 지회에서 산불 업무 종사자 31만 명에게 9046회의 산불 예방 교육과 진화, 장비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실무 교육을 실시, 현장에 투입했다.

협회에 주어진 임무와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산불 방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산불 방지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 자원을 효과적으로 지켜

낼 수 있도록 교육한다. 나아가 산림보호법 제3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산불 연구·조사, 기술·정보 교류 등의 사업을 통해 산불 방지 기술 증진에 기여하는 일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산불의 원인은 인위적인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성묘객 실화, 무숙 행위, 담뱃불, 주택 화재 등이 있다. 정신 이상자 또는 사회에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들의 무차별 방화도 종종 발생한다. 산불이 대형화되는 이유는 숲이 울창해지면서 낙엽 등 산림 내 연료 물질이 증가하고, 기후 변화로 인해 연중 고온 건조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기후적인 외부 환경 여건을 보면 건조 일수 증가, 강수량 감소, 잦은 강풍 등으로 산불 위험도가 증가되고 있다. 또한 농산촌 인구 증가, 고령화, 산림 연소물질 축적, 도시 팽창에 따른 산림 주변의 주거확대 등으로 산불 발생시 인명과 재산 피해의 위험이 증가되고 있다. 나아가 등산 등 산림 활동 인구 증가로 봄·가을에는 산불이 동시 다발하고 대형화하면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산불 예방

교육이 절실해지고 있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체계적인 산불 방지 교육 훈련, 산불 위험지 조사, 산불 소화 시설 등 국가 산림 정책 수행을 위해 협회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기술 개발, 교육 전문 기관으로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전국에 배치된 1만 1000명의 산불 진화 요원들이 산불 현장에 투입돼 진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도서 지역, 야간 산불 발생 시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특수진화 대원에 대한 맞춤형 산불 방지 교육 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소각 산불 근절을 위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교육도 필요하다.

또한 협회에서는 산불로 인한 사회적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과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산림 재난 대응팀’ 운영과 산불 원인 및 피해 현황 조사 등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의 지원에 중앙 정부와 지자체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無等鼓

스타벅스 1호점이 미국 시애틀에 문을 연 것은 1971년의 일이다. 당시 미국인들은 주로 저렴하고 쓴맛이 강한 베트남 로부스타 원두커피를 마셨다. 이와는 달리 창업자인 고든 보커 등은 부드럽고 향기가 뛰어나지만 가격이 좀 비싼 아라비카 원두커피를 즐겨 마셨다. 하지만 시애틀에는 이 아라비카 원두를 공급하는 곳이 없었다. 게다가 주변에 아라비카 원두 맛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들 3명은, 1만 달러씩 투자

이용해서 지은 3층 구조 물에 6~8개의 독립된 집이 있었다. 18세기 산업 혁명 이후 유럽과 북미에서 시작된 아파트 열풍은 유독 우리나라 특히 광주에서 세차게 불고 있다. 요즘 광주는 스타벅스와 아파트 천지다. 어느 순간 한 동네에 같은 ‘스타’이 3~4개씩 들어서고, 눈만 돌리면 시멘트 벽으로 둘러싸인 도시가 돼 버렸다. 다양성이야말로 도시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광주는 ‘획일’의 길로 가고 있다. 광주가 점점 더 매력 없는 도시가 돼 가는 것 같아 걱정이다. /유현성 정치부 부장 chadol@

스타벅스와 아파트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